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803
----------	------

발의연월일 : 2025. 4. 14.

발 의 자 : 박범계 · 박지원 · 추미애
김승원 · 정준호 · 김남근
신정훈 · 이정문 · 정을호
정성호 · 부승찬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대사회에서 기업, 단체는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는 방대한 자료를 소지하는 반면, 개인은 거의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증명하여야 할 사실에 대한 증거를 입수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특히, 현행법상 당사자는 문서제출명령 제도를 통하여 상대방 또는 제3자가 점유, 관리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미흡, 법원의 소극적 운용 등으로 인해 문서제출명령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포함),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그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이에 불응하는 경우의 제재를 다양하게 규정

하여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당사자가 증거를 수집하는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른바 ‘증거의 편재’를 완화하고자 함(안 제344조 등).

주요내용

가. 원칙적으로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 포함),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344조).

나.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문서 등 자료의 점유, 관리, 보관여부와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당사자 등을 신문할 수 있고, 예외사유가 없는 한 문서제출명령을 하도록 함(안 제347조).

다.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을 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우려가 있다는 점이 소명되면 비밀유지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347조의3).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유지명령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347조의6).

마. 당사자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 수 있음(안 제349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4조(문서 등 자료의 제출의무) ①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등 자료로서 제출될 경우 침해되는 이익이 제출로 인한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04조부터 제306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 등 자료로서 같은 조문에서 정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등 자료
2.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1호 이외의 문서 등 자료로서 제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문서 등 자료
3. 문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등 자료
4. 제3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등 자료

5.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는 문서 등 자료로서 제출될 경우 그 사람의 사회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문서 등 자료

6.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거나 추출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드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자료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때

2. 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문서 등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

제345조의 제목 “(문서제출신청의 방식)”을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의 방식)”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서제출신청”을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문서”를 각각 “문서 등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

5. 문서 등 자료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

제346조의 제목 “(문서목록의 제출)”을 “(문서 등 자료 목록의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중 “문서의”를 “문서 등 자료의”로, “문서로”를 “문서 등 자료로”로,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문서 등 자료”로, “문서에”를 “문서 등 자료에”로 한다.

제347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원은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문서 등 자료 제출을 명할 때에는 그가 문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지와 그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문서 등 자료의 점유, 관리, 보관 여부,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 제3자 또는 이들과 사용관계에 있거나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등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나 제3자가 그 문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한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신문절차에는 제2편제3장제6절의 규정을, 상대방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신문절차에는 제2편제3장제2절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④ 법원은 문서 등 자료 제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결정으로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 등 자료의 제출 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문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한다고 스스로 인정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문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3. 상대방 당사자, 제3자 또는 이들과 사용관계에 있거나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등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문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문 결과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문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법원은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이 문서 등 자료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신청대상인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나 제3자에게 그 문서 등 자료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347조의2부터 제347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7조의2(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의 제출형식) ① 당사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당해 업무에서

합리적으로 생성된 형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지정한 형식을 준수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자는 당해 업무에서 합리적으로 생성된 형식으로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347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원은 제344조, 제347조에 따라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의무를 심리하는 과정이나 그 제출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문서 등 자료가 공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소명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당사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수적인 자 등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소송의 계속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 ⑥ 제1항의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에서 당사자가 제외되는 경우에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당사자에게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347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한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347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

-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위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취소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④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를 송달받

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⑥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제3항에 따라 결정서의 송달을 받을 자 외에 해당 문서 등 자료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도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47조의5(비밀유지명령에 따른 변론의 비공개, 열람제한 등) ①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심리하는 변론 등은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②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사람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기재된 부분의 소송기록,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재판서에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기재를 생략하거나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기재된 재판서에 대한 열람 또는 정본·등본·초본이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법원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의 제출, 송달, 보관 등에 있어서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

하여야 한다.

제347조의6(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7조의3에 따른 비밀유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점유, 관리, 보관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48조의 제목 “(불복신청)”을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문서제출의”를 “문서 등 자료제출”로, “즉시항고를”를 “이의신청을”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제349조의 제목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를 “(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당사자가 제346조 및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5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한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2.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문서 등 자료의 기재

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그 문서 등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그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3. 패소판결

4.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위반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350조의 제목 “(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를 “(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의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자신에 대한 소가 제기되었거나 장래에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와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훼손·은닉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사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49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당해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할 의무가 있거나 전산 시스템의 일상적 운용 중 문서 등 자료의 삭제가 이루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1조의 제목 “(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를 “(제3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로 하고, 같은 조 중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347조제4

항부터 제6항까지의”로, “아니한”을 “아니하거나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한”으로 한다.

제3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1조의2(문서 등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문서 등 자료 목록이나 문서 등 자료를 뒤늦게 공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다만, 뒤늦게 제출된 증거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46조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문서 등 자료 목록을 제출할 경우
2.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할 경우

제366조제2항 전단 중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소장이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344조(문서의 제출의무) ① 다</u> <u>음 각호의 경우에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u></p> <p>1. <u>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u></p> <p>2. <u>신청자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거나 보겠다고 요구할 수 있는 사법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u></p> <p>3. <u>문서가 신청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었거나, 신청자와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것인 때. 다만, 다음 각목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가. 제304조 내지 제306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로서 같은 조문들에 규정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u></p>	<p><u>제344조(문서 등 자료의 제출의무) ① 소송상 증명할 사실과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점유(간접점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서 등 자료로서 제출될 경우 침해되는 이익이 제출로 인한 이익보다 더 크다는 것이 소명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1. <u>제304조부터 제306조까지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있는 문서 등 자료로서 같은 조문에서 정한 동의를 받지 아니한 문서 등 자료</u></p> <p>2. <u>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1호 이외의 문서 등 자료로서 제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거나 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문서 등 자료</u></p>

나. 문서를 가진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서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다. 제315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항중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문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제1항제3호나목 및 다목에 규정된 문서

2. 오로지 문서를 가진 사람이 이용하기 위한 문서

3. 문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 또는 그와 제3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에 관하여 같은 조에 규정된 사항이 적혀 있는 문서 등 자료

4. 제3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적혀 있고 비밀을 지킬 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한 문서 등 자료

5. 사람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는 문서 등 자료로서 제출될 경우 그 사람의 사회생활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문서 등 자료

6.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어렵거나 추출하는 데 과도한 비용이 드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자료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문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은 그 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

1.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p>제345조(문서제출신청의 방식) <u>문서제출신청</u>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문서</u>의 표시 2. <u>문서</u>의 취지 3. <u>문서를 가진 사람</u> 4. (생략) 5. <u>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의 원인</u> <p>제346조(문서목록의 제출) 제345조의 신청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신청대상이 되는 <u>문서</u>의 취지나 그 <u>문서로</u> 증명할 사실을 개괄적으로 표시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신청내용과 관련하여 <u>가지고 있는 문서</u> 또는 신청내용과 관련하여</p>	<p><u>문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때</u></p> <p>2. 당사자가 <u>문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문서 등 자료에 대한 열람 또는 송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u></p> <p>제345조(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의 방식) <u>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문서 등 자료</u>----- 2. <u>문서 등 자료</u>----- 3. <u>문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사람</u> 4. (현행과 같음) 5. <u>문서 등 자료와 증명할 사실과의 관련성</u> <p>제346조(문서 등 자료 목록의 제출) -----</p> <p>----- <u>문서 등 자료의</u></p> <p>--- <u>문서 등 자료로</u> -----</p> <p>-----</p> <p>----- <u>점유, 관리, 보관하는 문서 등 자료</u> -----</p>
--	---

서증으로 제출할 문서에 관하여
그 표시와 취지 등을 적어 내도
록 명할 수 있다.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문서제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문서를
가진 사람에게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문서제출의 신청이 문서의
일부에 대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부분만의 제
출을 명하여야 한다.

----- 문서 등 자료에

-----.

제347조(제출신청의 허가여부에
대한 재판) ① 법원은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따라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문서 등 자료
제출을 명할 때에는 그가 문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
지와 그 문서 등 자료가 제344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기간을 정
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
어야 한다.

②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문서 등 자료의 점
유, 관리, 보관 여부, 제출하지
아니할 면제사유의 존부 등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 제3자
또는 이들과 사용관계에 있거나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등
을 신문할 수 있다. 다만, 상대
방 당사자나 제3자가 그 문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한 문서 등
자료 제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③ 제3자에 대하여 문서의 제출을 명하는 경우에는 제3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문서가 제344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문서를 다른 사람이 보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에 대한 신문절차에는 제2편제3장제6절의 규정을, 상대방 당사자가 아닌 자에 대한 신문절차에는 제2편제3장제2절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④ 법원은 문서 등 자료 제출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 문서 등 자료를 가진 사람에게 결정으로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 등 자료의 제출기간을 정할 수 있다.

1. 문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한다고 스스로 인정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문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하는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한 경우

3. 상대방 당사자, 제3자 또는 이들과 사용관계에 있거나 이들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등

<신 설>

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문기
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2항 본문에 따른 신문 결과
나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문
서 등 자료를 점유, 관리, 보관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법원은 문서 등 자료 제출신
청이 문서 등 자료의 일부에 대
하여만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부분만의 제출을 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법원은 신청대상인 문서 등
자료가 제3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나 제3
자에게 그 문서 등 자료를 제시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 설>

제347조의2(전자적으로 생성된 문
서 등 자료의 제출형식) ① 당
사자는 전자적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당해
업무에서 합리적으로 생성된 형
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 당사자가 제출된 문서

<신 설>

등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
방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법원
의 결정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
가 지정한 형식을 준수한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자는 당해 업무에서 합리
적으로 생성된 형식으로 전자적
으로 생성된 문서 등 자료를 제
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
복할 수 없다.

제347조의3(비밀유지명령) ① 법
원은 제344조, 제347조에 따라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의무를 심
리하는 과정이나 그 제출명령이
발령된 이후에 문서 등 자료가
공개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소명
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신청
에 따라 결정으로 당사자(법인
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당사자
를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는 자,
그 밖에 소송수행에 필수적인
자 등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알게 된 자에게 그 소송의 계속

적인 수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이 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 외의 자에게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하 “비밀유지명령”이라 한다)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비밀유지명령을 받을 자
2.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될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특정하기에 충분한 사실
3.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비밀유지명령은 제3항의 결정서가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⑤ 비밀유지명령의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 설>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⑥ 제1항의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에서 당사자가 제외되는 경우에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사람은 그 당사자에게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347조의4(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한 법원)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제347조의3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비밀유지명령을 결정으로 취소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위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취소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⑥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제3항에 따라 결정서의 송달을 받을 자 외에 해당 문서 등 자료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도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347조의5(비밀유지명령에 따른 변론의 비공개, 열람제한 등) ①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을 심리하는 변론 등은 비공개로 하여야 한다.

②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 이외의 사람은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신 설>

기재된 부분의 소송기록, 재판서·조서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③ 법원은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재판서에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에 관한 구체적 기재를 생략하거나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기재된 재판서에 대한 열람 또는 정본·등본·초본이 교부되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법원과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비밀유지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의 제출, 송달, 보관 등에 있어서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47조의6(비밀유지명령 위반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47조의 3에 따른 비밀유지 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죄는 비밀유지명령

제348조(불복신청) 문서제출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349조(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의 점유, 관리, 보관을 신청한 자의 고소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48조(이의신청) 문서 등 자료 제출-----의 이의신청을-----. 이의신청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다.

제349조(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제346조 및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불이익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 제5호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한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2. 문서 등 자료의 제출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문서 등 자료의 기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신 설>

<신 설>

<신 설>

제350조(당사자가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당사자가 상대방의 사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의 무가 있는 문서를 훼손하여 버리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한 때에는, 법원은 그 문서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 설>

주장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고 그 문서 등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소명되는 경우 증명할 사실에 관한 그 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

3. 패소판결

4. 소송비용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

5. 위반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350조(당사자가 문서 등 자료의 사용을 방해한 때의 효과) ① 자신에 대한 소가 제기되었거나 장래에 제기될 것이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당사자는 그와 관련된 문서 등 자료를 훼손·은닉하거나 이를 사용할 수 없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당사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349조를 준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당해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할 의무가 있거나 전산시스템의 일상적 운용 중 문서 등 자료의 삭제가 이루

제351조(제3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제3자가 제3
47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따르지 아
니한 때에는 제3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어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1조(제3자가 문서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제재) --
-----제347조제4항부터 제
6항까지의-----아
니하거나 제출명령의 대상이 된
문서 등 자료를 삭제한-----.

제351조의2(문서 등 자료제출명령
을 위반한 공격·방어방법의 각
하) 당사자가 고의나 중대한 과
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문서 등 자료 목록
이나 문서 등 자료를 뒤늦게 공
격 또는 방어방법으로 제출하는
때에 법원은 직권 또는 상대방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다만, 뒤늦게 제
출된 증거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이익이 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46조의 명령에 따르지 아
니하거나 거짓으로 문서 등
자료 목록을 제출할 경우
2. 제3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u>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문서 등 자료를 제 출할 경우</u>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① (생략)	제366조(검증의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3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u>200만원</u>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 ----- ----- ----- <u>500만원</u> ----- -----.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